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변화 의미 분석*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for Korean KCI Journals

정경희 (Kyoung Hee Joung)**

김규환 (Gyuhwan Kim)***

초 록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관리, 학술지, 중단연구, 오픈엑세스, 저작권 산업화, 학술지 출판
copyright, copyright management, journals, longitudinal study, open access,
copyright industrialization, scholarly publishing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하였음.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하였음.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제1저자)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yuhwan@jj.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7년 6월 8일 ■ 최초심사일자: 2017년 6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7년 6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4(2), 159-180,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2.159]

1. 서론

학술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것은 오픈엑세스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오픈엑세스의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오픈엑세스 출판의 경우에는 구독기반학술지와 달리 출판사가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양도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원저작권자로서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이용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저작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는 그들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저자들을 위하여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등 오픈엑세스를 지원하는 라이선스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들 유형 중 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오픈엑세스 전략인 셀프아카이빙에서는 저작권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구독기반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출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저작권자가 된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오픈엑세스학술지 출판에서 출판사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유형이나 구독기반학술지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정책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루어져왔다(Coleman, 2007; Dawson & Yang, 2016; Harper, 2009).

국내에서 학술지의 저작권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오픈엑세스와 어떤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

고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 주체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령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모호하여 정확한 권리 소유의 주체나 양도된 권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이재민, 2005; 홍재현, 2008; 정경희, 김규환, 2016)은 영미권의 학술지 저작권 관련 연구와 달리 주로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그 자체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저작권 관리 현황 자체를 파악하고 각 학문분야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학술지의 유통, 공유 특히 오픈엑세스의 확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으로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조사한 2008년(홍재현)과 2016년(정경희, 김규환)의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학술지들이 저작권 소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저작권 소유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기관이 저자에게 허락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2008년과 2016년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학문분야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약 10년간에 걸친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술지와 저작권 그리고 오픈액세스의 관계

학술지와 저작권은 둘 모두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배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Ramello, 2010). 학술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연구자로서 명성을 얻음으로써 간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얻게 해 준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저자가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식이 발전하고 이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현재 영미권에서 학술지와 저작권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지만 학술지가 등장한 처음부터 이와 같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속성상 학술지와 저작권이 공유된 어떤 지점이 있기는 하나 17세기 중반 학술지가 처음 등장한 이후 얼마동안 저작권과 학술지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다(Ramello, 2010). 왜냐하면 초기의 대다수 학술지는 학회나 학술기관이 출판하였는데 이들은 저작권을 소유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설령 학술지 출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분명하거나 또는 모호하게 이용허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이후 학술지 출판모델의 기초가 되었다. 즉, 출판사는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 그 대신 원고수정이나 편집, 인쇄, 배포 등을 위하여 출판사의 자원을 투자하는 모델이 생겨났다(Page, Campbell, & Meadows, 1996). 이러한 모델이

수십년간 진행되면서 학술지 출판이 점차 산업화되었고, 특히 1990년대에는 몇몇 대규모 회사가 학술지 출판을 장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증가하는 가격상승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지 출판에서만만의 특징이 아니라 저작권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Ramello, 2010). 저작권은 저작물 소유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시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시장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학술지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그들이 시장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견고하게 자리 잡은 학술지와 저작권의 관계는 그 산업화의 정점이었던 2000년대 초에 학술지 유통의 새로운 모델인 오픈액세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조경식, 2014). 이는 학술논문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 즉, 저자, 정부 및 연구비 지원재단, 출판사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전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아 시장에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출판사는 정부나 연구비 지원재단, 대학 등의 요구로 자신의 논문을 셀프 아카이빙해야 하는 저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연구도 주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하거나(Melero, Laakso, & Navas-Fernández, 2017; Melero, Rodríguez-Gairín, Abad-García, & Abadal, 2014; Laakso, 2014)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방식(Gadd

& Troll Covey, 2017)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Gadd & Troll은 2004년에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07개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을 2015년까지 12년간 추적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프리프린트나 포스트프린트, 엠바고 기간이나 셀프아카이빙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는 12%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셀프아카이빙 방법, 장소, 시기를 제한하면서 허용하는 정책은 각각 119%, 190%, 1000%씩 증가하여 결국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이 점차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프리프린트와 포스트프린트 둘 모두에 대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는 8% 증가하였지만, 이 두 개 유형을 엠바고 기간 없이 셀프아카이빙 하도록 허용하는 출판사는 35%나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재민, 2005; 홍재현, 2008; 최윤희, 2013; 정경희, 김규환, 2016)도 기본적으로는 학술지의 오픈엑세스와 어떤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학술지는 영미권에 비하여 출판기관이 셀프아카이빙은 물론이고 저작권의 소유, 양도되는 권리의 내용 등 저작권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홍재현, 2008) 오픈 엑세스를 위한 조건보다는 저작권 정책의 유무나 권리 소유주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역시 오픈엑세스와 관련된 저작권 정책보다는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정책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약 10년간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리의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발표된 홍재현의 연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2016년 발표된 정경희, 김규환의 연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시계열 분석 대상은 두 연구에서 공통으로 다루었던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술지 논문의 권리 소유 주체가 밝혀져 있는가?
- 둘째, 누가 학술지 논문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 셋째, 권리귀속을 위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넷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명시하고 있는가?
- 다섯째,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 여섯째, 저작권 양도 후 저자에게 허락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2008년과 2016년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학술지 전체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학문분야별 변

화를 분석하였다.

2008년 홍재현의 연구는 2007년 7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하 등재지) 906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방문하여 관련 규정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학술지 발간기관의 편집진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관련 데이터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홍재현, 2008). 2016년 정경희, 김규환의 연구는 2015년 7월 기준 등재지 1,904종 전체 중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었던 14종을 제외한 1,890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정경희, 김규환, 2016). 따라서 두 연구 모두 당시의 등재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7월과 2015년 7월 기준 등재지의 분야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8년간 등재지 수는 약 2배 증가하였다. 등재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등재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의학 분야의 비중은 약간씩 높아졌으나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분야의 비중은 약간씩 낮아졌다. 특히 가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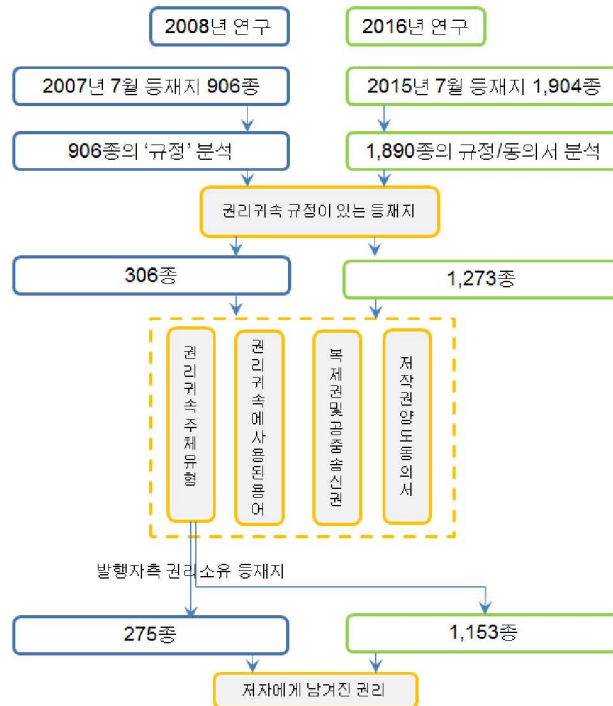
이 높아진 분야는 1.7%에서 3.3%로 약 2배 증가한 복합학이며, 반대로 가장 비중이 낮아진 분야는 6.1%에서 3.7%로 절반정도 감소한 농수해양학 분야였다.

그런데 2008년 연구는 저작권을 밝히는 규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투고규정'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논문투고규정은 없지만 저작권양도동의서는 있는 경우에 사실상 권리귀속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는 등재지가 306종보다 다소 많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2016년 연구는 논문투고규정이 없지만 저작권양도동의서는 있는 등재지를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등재지 즉, 논문투고규정은 없고 저작권양도동의서만 있는 등재지가 132종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또한 2008년 연구에서 단순한 계산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를 바로잡아 사용하였다.

2008년과 2016년의 연구에서 권리귀속규정이 있다고 밝혀진 등재지는 각각 906종과 1,273종이었으며 각 연구에서는 이 등재지를 대상으

<표 1> 등재지 종수 및 분포의 증가 현황

분야	2007년 7월		2015년 7월	
	종수(종)	비율(%)	종수(종)	비율(%)
인문학	233	25.7	486	25.7
사회과학	279	30.8	646	34.2
예술체육	39	4.3	101	5.3
복합학	15	1.7	63	3.3
자연과학	75	8.3	105	5.6
공학	124	13.7	212	11.2
의약학	86	9.5	208	11.0
농수해양	55	6.1	69	3.7
계	906	100	1,890	100



〈그림 1〉 2008, 2016년 연구에서 조사 대상 등재지 수와 조사내용

로 권리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이를 밝히는 구체적인 단서규정이 있는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양도받고 있는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권리가 발행자측에 양도된 등재지 275종과 1,153종을 대상으로 권리양도 후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2008년의 연구에서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306종 중 예술체육 분야와 복합학 분야는 각각 9종(이 분야 전체 등재지 39종의 23.1%)과 2종(이 분야 전체 등재지 15종의 13.3%)에 불과하여(〈표 2〉 참조) 이를 당시 해당 분야 등재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하면 2016년 연구에서는 예술체

육 분야 62종(이 분야 전체 등재지 101종 중 61.4%), 복합학 분야 37종(이 분야 전체 등재지 63종 중 58.7%)이었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경우 2016년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4. 변화분석

4.1 권리귀속의 명시와 소유주체

4.1.1 귀속주체 명시에 있어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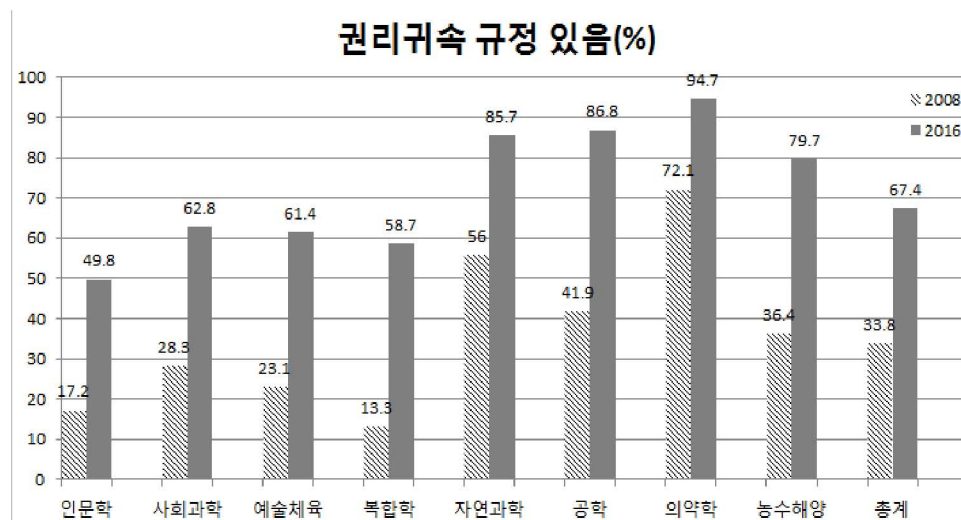
저작권 귀속주체를 밝히고 있는 등재지는 수적으로나 비율로 상당히 많아졌다. 2008년에는 등재지 중 33.8%만이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

었으나 2016년에는 이의 두 배에 이르는 67.4%가 권리귀속을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합학 분야는 13.3%에서 58.7%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여 변화가 가장 큰 분야였다. 권리귀속을 밝힌 등재지가 17.2%로 매우 낮았던 인문학 분야도 2016년에는 49.8%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하여 절반 정도의 등재지가 권리귀속을 밝히고 있었다. 사회과학 분야도 28.3%에서 62.8%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권리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 비율이 가장 많았던 의약학 분야는 기존의 72.1%에서 20% 증가하여 여전히 권리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학과 농수해양학 분야는 거의 2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자연과학 분야도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2008년 연구에서 권리귀속을 밝힌 경우가 50% 이하였던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공학, 농수해양학 분야 모두 그 증가율이 두배 이상이었다. 등재지 전체로 볼 때 권리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와 그렇지

않은 등재지의 비율이 기존의 3:6에서 6:3으로 역전하였다(〈그림 2〉, 〈표 2〉 참조).

4.1.2 소유 주체에 있어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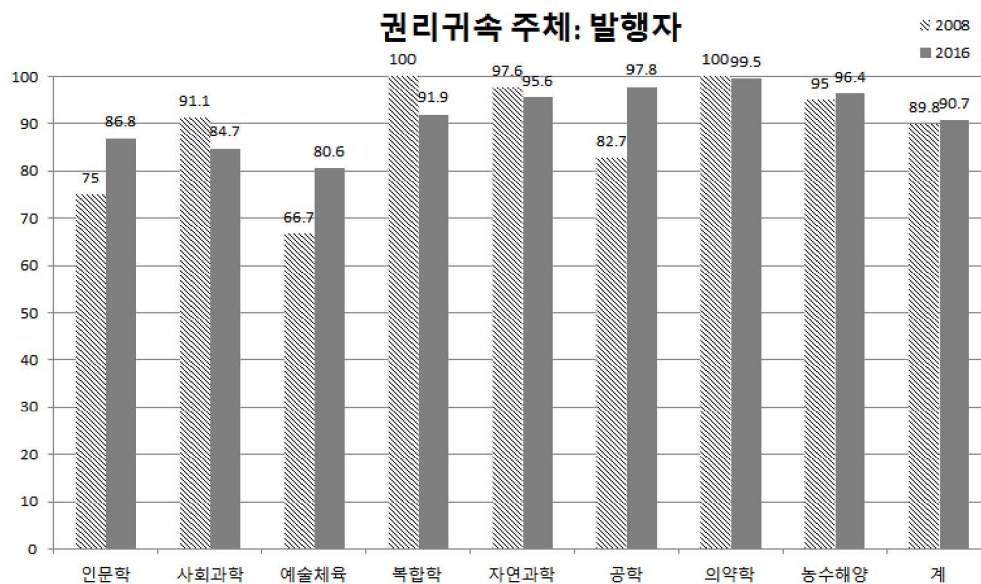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등재지만을 대상으로 권리소유 주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8년 연구에서 권리소유주체는 발행자측인 경우가 89.9%, 2016년 연구에서는 90.7%로 0.8% 증가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3〉 참조). 2008년과 2016년 모두 학회, 연구소, 대학 등 학술지 발행기관 측에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에 이르는 점에서 변화가 없었다.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2%에서 4.2%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그림 4〉 참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5.9%에서 4.6%로 1% 감소하였다(〈표 3〉 참조). 분야별로는 조금씩 다른 현상이 보인다. 인문학, 예술체육, 공학 분야는 발행자측이 소유하는 경우가 약 10%정도 이상 증



〈그림 2〉 저작권 귀속주체를 밝힌 등재지의 분야별 증가 현황

〈표 2〉 등재지의 권리귀속 규정 유무 비교

분야	규정		2008				2016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	%	종	%	계(%)		종	%	종	%
인문학	40	17.2	193	82.8	233(100)		242	49.8	244	50.2
사회과학	79	28.3	200	71.7	279(100)		406	62.8	240	37.2
예술체육	9	23.1	30	76.9	39(100)		62	61.4	39	38.6
복합학	2	13.3	13	86.7	15(100)		37	58.7	26	41.3
자연과학	42	56	33	44	75(100)		90	85.7	15	14.3
공학	52	41.9	72	58.1	124(100)		184	86.8	28	13.2
의약학	62	72.1	24	27.9	86(100)		197	94.7	11	5.3
농수해양	20	36.4	35	63.6	55(100)		55	79.7	14	20.3
총계	306	33.8	600	66.2	906(100)		1,273	67.4	617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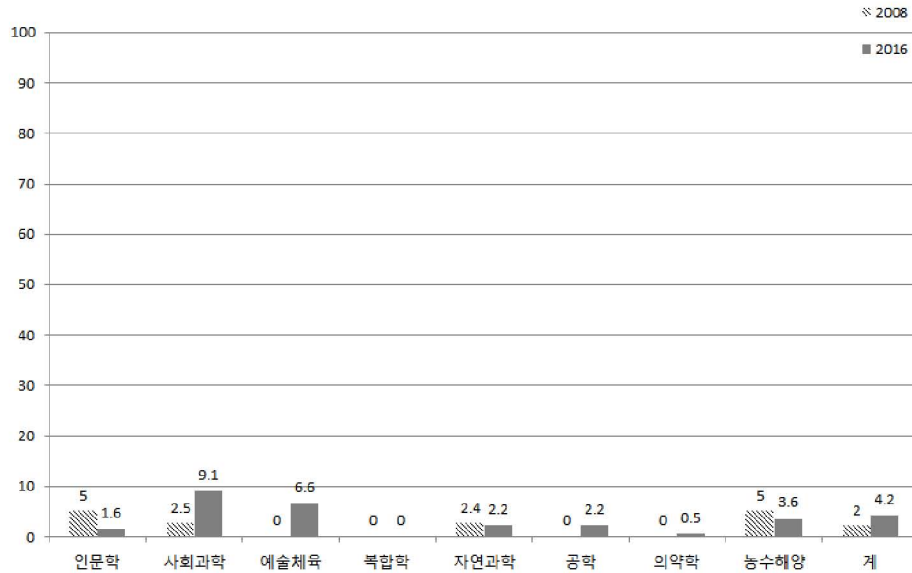


〈그림 3〉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한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 현황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에서는 발행자측이 소유하는 경우가 약 6%, 8%씩 감소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분야는 저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한 비율이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9.1%였다. 자연과학 분야는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한 비율이 2% 감소하였

고 의약학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다만, 공학 분야는 발행자측이 소유한 비율도 약 15% 증가하고, 저자가 소유한 비율도 소량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였던 등재지가 없어지는 대신 발행자측이나 저자측으로 그 권리소유를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귀속 주체: 저자



〈그림 4〉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 현황

〈표 3〉 등재지의 권리귀속 주체별 비교

분야	귀속주체		2008								2016							
			발행자측		저자		공동		기타		발행자측		저자		공동		기타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인문학	30	75	2	5	8	20	0	0	40 (100)		210	86.8	4	1.6	28	11.6	0	0
사회과학	72	91.1	2	2.5	4	5.1	1	1.3	79 (100)		344	84.7	37	9.1	21	5.2	4	1
예술체육	6	66.7	0	0	0	0	3	33.3	9 (100)		50	80.6	4	6.6	8	12.9	0	0
복합학	2	100	0	0	0	0	0	0	2 (100)		34	91.9	0	0	1	2.7	2	5.4
자연과학	41	97.6	1	2.4	0	0	0	0	42 (100)		86	95.6	2	2.2	1	1.1	1	1.1
공학	43	82.7	0	0	6	11.5	3	5.8	52 (100)		180	97.8	4	2.2	0	0	0	0
의약학	62	100	0	0	0	0	0	0	62 (100)		196	99.5	1	0.5	0	0	0	0
농수해양	19	95	1	5	0	0	0	0	20 (100)		53	96.4	2	3.6	0	0	0	0
계	275	89.8	6	2	18	5.9	7	2.3	306 (100)		1,153	90.7	54	4.2	59	4.6	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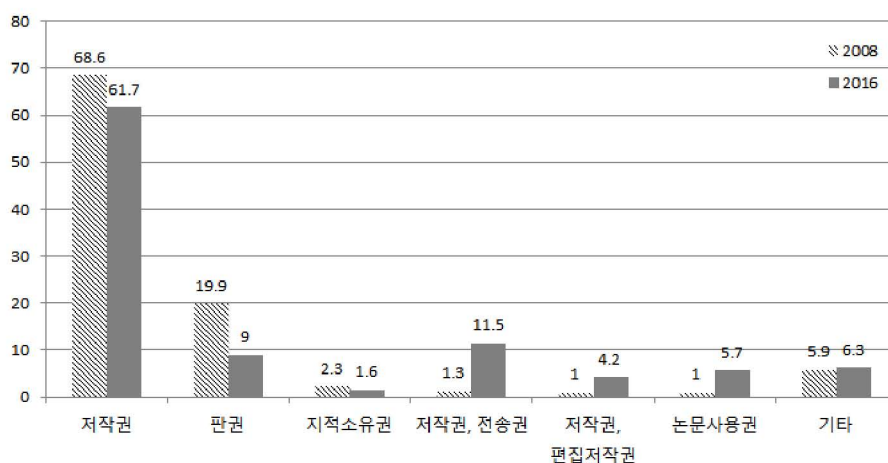
4.2 귀속주체를 밝히는 방법

4.2.1 권리 귀속에 사용된 용어

권리귀속을 위하여 사용된 용어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가장 눈에 띄이는 변화는 판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8년 이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19.9%였으나 2016년 9%로 약 11% 감소하였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등재지도 68.6%에서 61.8%로 감소하였고,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 사용도 2.3%에서 1.6%로 감소하였다. 대신 저작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복제 또는 전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1.3%에서 11.5%로 약 10% 증가하였으며, 저작권과 더불어 편집저작권(또는 출판권, 출판 소유권 등 출판과 관련한 용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도 1%에서 4.2%로 증가하였다. 또한 논문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도 1%에서 5.7%로 증가하였다 (<그림 5>, <표 4> 참조).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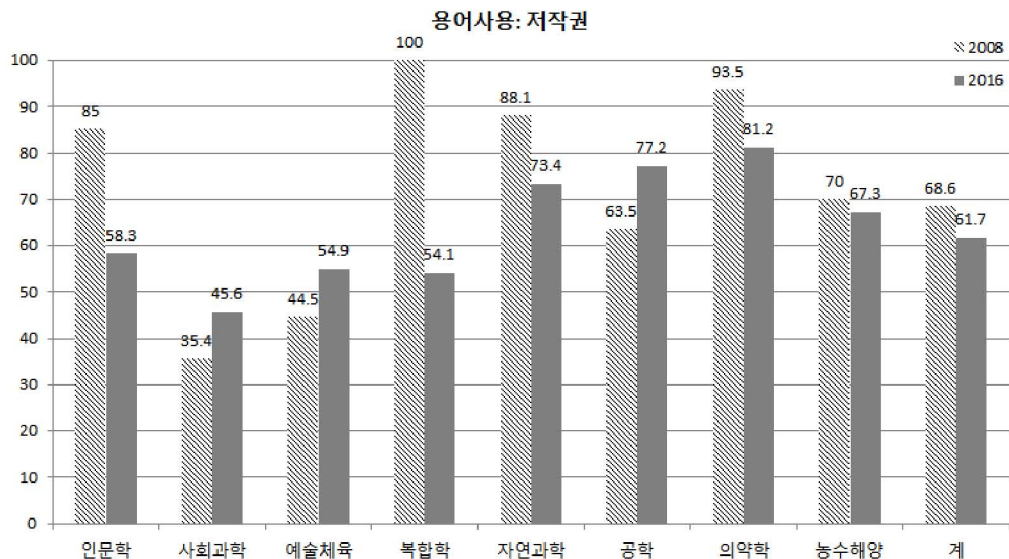
이 크게 감소한 경우는 인문학과 복합학 분야로 각각 약 26.7%와 45.9%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자연과학, 의학 분야도 각각 14.7%, 12.3% 감소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회과학, 예술체육, 공학 분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의 비율이 각각 10.2%, 10.4%, 13.7%씩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 보면, 사회과학 분야는 49.4%에서 18.2%로 31.2%나 감소하였고, 예술체육 분야와 공학과 농수해양 분야도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인문학 분야는 5%에서 5.8%로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그런데, 인문학 분야는 저작권과 함께 전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비율이 기존의 0%에서 17.8%로 대폭 상승하였다(<그림 8> 참조).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사용하고 있는 등재지는 2008년에는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없었으나 2016년에는 분야별로 약간씩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더불어 편집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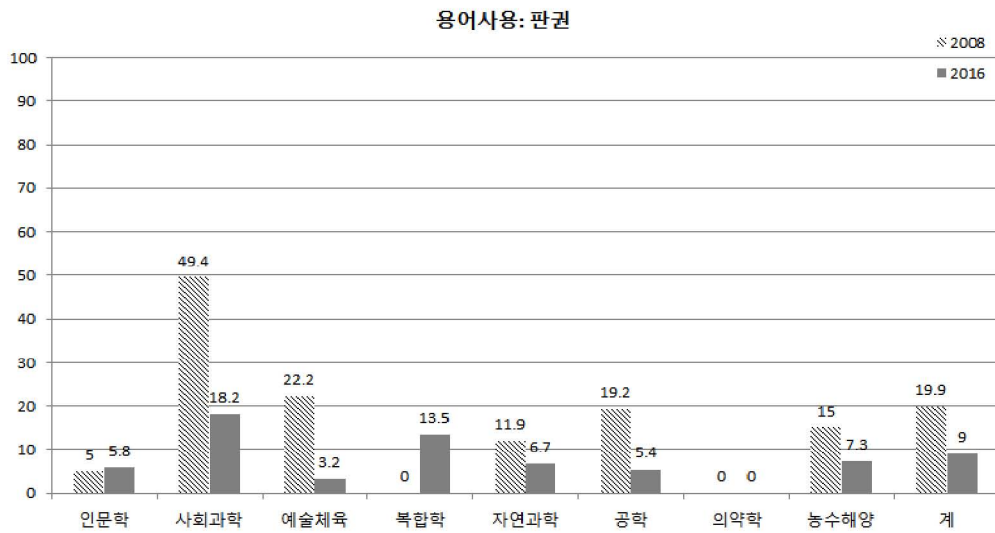
<그림 5> 권리귀속에 사용된 용어의 증감률

〈표 4〉 권리귀속에 사용된 다양한 권리 명칭 사용의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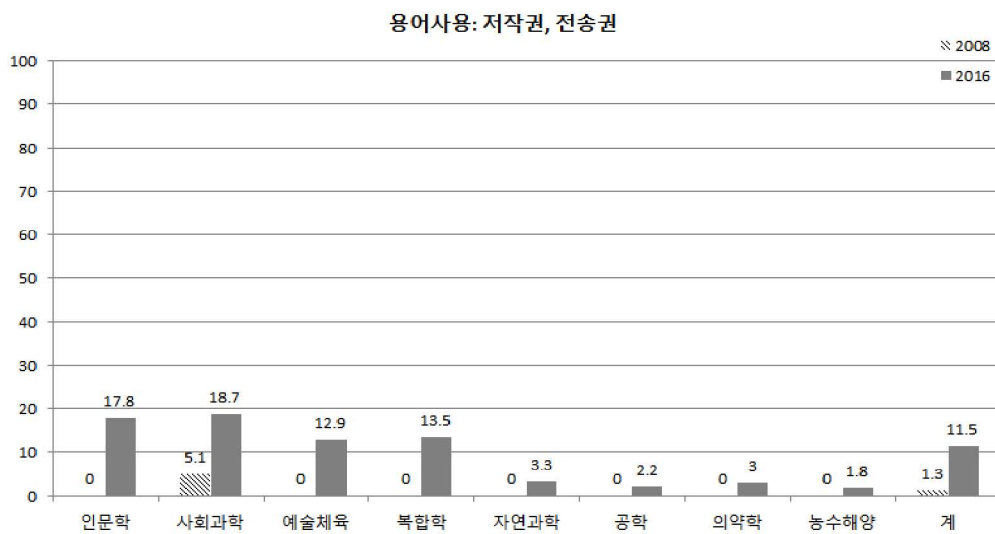
구분	용어	저작권		판권		지적소유권		저작권, 복제·전송권		저작권, 편집저작권		논문사용권		기타		계(%)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2008	인문학	34	85	2	5	2	5	0	0	0	0	0	0	2	5	40(100)
	사회과학	28	35.4	39	49.4	1	1.3	4	5.1	0	0	0	0	7	8.8	79(100)
	예술체육	4	44.5	2	22.2	0	0	0	0	0	0	0	0	3	33.3	9(100)
	복합학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100)
	자연과학	37	88.1	5	11.9	0	0	0	0	0	0	0	0	0	0	42(100)
	공학	33	63.5	10	19.2	2	3.8	0	0	3	5.8	3	5.8	1	1.9	52(100)
	의약학	58	93.5	0	0	0	0	0	0	0	0	0	0	4	6.5	62(100)
	농수해양	14	70	3	15	2	10	0	0	0	0	0	0	1	5	20(100)
	계	210	68.6	61	19.9	7	2.3	4	1.3	3	1	3	1	18	5.9	306(100)
2016	인문학	141	58.3	14	5.8	14	5.8	43	17.8	7	2.9	1	0.4	22	9.1	242(100)
	사회과학	185	45.6	74	18.2	4	0.9	76	18.7	19	4.7	23	5.7	25	6.2	406(100)
	예술체육	34	54.9	2	3.2	2	3.2	8	12.9	11	17.8	2	3.2	3	4.8	62(100)
	복합학	20	54.1	5	13.5	0	0.0	5	13.5	0	0.0	5	13.5	2	5.4	37(100)
	자연과학	66	73.4	6	6.7	0	0.0	3	3.3	1	1.1	11	12.2	3	3.3	90(100)
	공학	142	77.2	10	5.4	0	0.0	4	2.2	3	1.6	16	8.7	9	4.9	184(100)
	의약학	160	81.2	0	0.0	0	0.0	6	3	13	6.6	10	5.1	8	4.1	197(100)
	농수해양	37	67.3	4	7.3	0	0.0	1	1.8	0	0.0	5	9.1	8	14.5	55(100)
	계	785	61.7	115	9	20	1.6	146	11.5	54	4.2	73	5.7	80	6.3	1,273(100)



〈그림 6〉 권리귀속에 '저작권'이 사용된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률



〈그림 7〉 권리귀속에 ‘판권’이 사용된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률



〈그림 8〉 권리귀속에 저작권과 전송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술지의 분야별 증감 현황

2008년에는 공학분야가 유일하였으나 2016년에는 복합학과 공학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있었으며, 특히 예술 체육분야는 17.8%, 의약학 분야는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학분야는 오히려 5.8%에서 1%로 감소하였다. 논문사

용권이라는 용어는 2008년 공학분야에서만 사용되었으나, 2016년에는 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학과 자연과학분야는 이 용어의 사용률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각각 14%, 12% 증가). 공학분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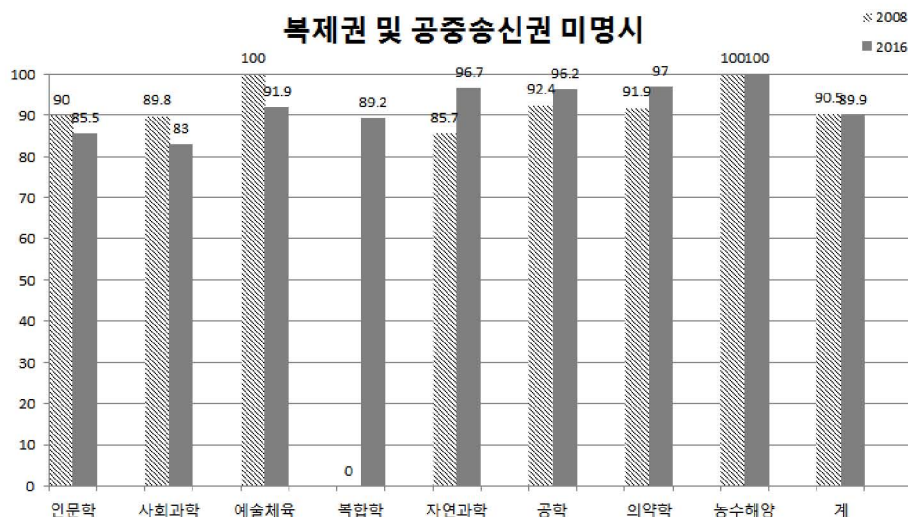
는 편집저작권에서와는 달리 논문사용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약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전 분야에 걸쳐 저작권이라는 용어 사용은 감소한 대신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 구체적인 지분권을 사용하는 등재지는 증가하였고, 저작권을 대신하여 사용되던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감소하였다. 저작권법에 없는 편집 저작권이나 논문사용권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인문학 분야는 저작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감소한 반면 복제 및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증가하였고 판권이라는 용어도 여전히 유사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대폭으로 감소한 반면 저작권과 복제권, 전송권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사용은 감소한 반면, 논문사용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증가하였다. 판권이라는 용

어사용 비율이 다른 STM 분야보다 높았던 공학 분야는 이 용어 사용률은 감소한 반면 저작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증가하여 다른 STM 분야와 용어사용 패턴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4.2.2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명시한 등재지 현황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또는 이 둘 모두를 명시한 등재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8년에는 이들 권리 중 어느 것도 명시하지 않은 등재지가 90.5%였는데 2016년에도 89.9%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그림 9〉 참조). 이들 권리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사용하여 권리 귀속을 표현하고 있는 등재지는 여전히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분야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분야는 이들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등재지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는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림 9〉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명시하지 않은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률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명시한 등재지의 경우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등재지와 공중송신권만을 명시한 등재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복제권을 사용하는 등재지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특히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재지가 1.3%에서 10.6%로 대폭 증가하였고 복제권 사용률은 감소하였으며, 공중송신권 사용률은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인문학 분야는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한 등재지는 10%에서 12%로 약간 증가하였고, 공중송신권을 사용한 등재지도 0%에서 2.5%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복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008과 2016년 모두 없었다.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분야에서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둘 모두

사용하는 등재지나 복제권만을 사용하는 등재지의 비율은 약간씩 감소한 반면 자연과학과 의약학의 경우 공중송신권을 사용하는 등재지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농수해양학 분야는 2008년과 2016년 모두 이들 권리를 명시하는 등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4.3 저작권양도동의서 사용 등재지의 증감 현황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이용하여 논문 투고자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등재지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2008년 연구는 저작권 관련 규정이 있는 등재지에 대해서만 동의서 유무를 조사하였고, 2016년 연구는 규정이 없더라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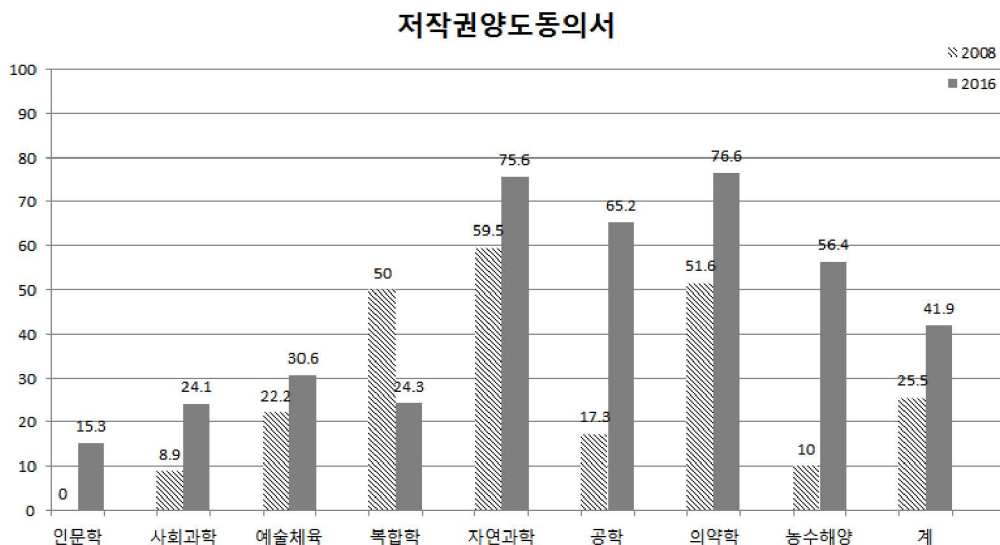
〈표 5〉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명시한 등재지의 증감 현황

권리 분야	2008									2016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송신		미명시		계 (%)	복제+ 공중송신		복제		공중송신		미명시		계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인문학	4	10	0	0	0	0	36	90	40 (100)	29	12	0	0	6	2.5	207	85.5	242 (100)
사회과학	1	1.3	3	3.8	4	5.1	71	89.8	79 (100)	43	10.6	1	0.2	25	6.6	337	83	406 (100)
예술체육	0	0	0	0	0	0	9	100	9 (100)	4	6.5	0	0	1	1.6	57	91.9	62 (100)
복합학	2	100	0	0	0	0	0	0	2 (100)	4	10.8	0	0	0	0	33	89.2	37 (100)
자연과학	1	2.3	5	11.9	0	0	36	85.7	42 (100)	0	0	1	1.1	2	2.2	87	96.7	90 (100)
공학	2	3.8	2	3.8	0	0	48	92.4	52 (100)	2	1.1	5	2.7	0	0	177	96.2	184 (100)
의약학	4	6.5	1	1.6	0	0	57	91.9	62 (100)	1	0.5	1	0.5	4	2	191	97	197 (100)
농수해양	0	0	0	0	0	0	20	100	20 (100)	0	0	0	0	0	0	55	100	55 (100)
계	14	4.6	11	3.6	4	1.3	277	90.5	306 (100)	83	6.5	8	0.6	38	3	1,144	89.9	1,273 (100)

의서만 있는 등재지도 조사하였다. 우선 규정이 있으면서 동의서가 있는 등재지만 살펴보면 25.5%에서 41.9%로 16% 증가하였으며, 동의서만 있는 경우까지 합할 경우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복합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공학분야는 17.3%에서 65.2%로 4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수해양학 분야도 10%에서 56.4%로 약 46% 증가하여 상당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보다는 낮지만 의약학분야 역시 51.6%에서 76.6%로 27% 증가하였다. 이들 STM 분야에서의 높은 증가율에 비하면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인문학 분야는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가 0%에서 15.3%로 증가하였고, 사회과학 분야 역시 8.9%에서 24.1%로 15% 증가하였다. 예술체육분야는 이보다 조금 낮은 약 8% 증가하였다(〈그림 10〉, 〈표 6〉 참조).

4.4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

2008년 연구에서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한 등재지는 275종이었고, 2016년 연구에서는 1,153종이었다. 발행자측이란 등재지를 발행하고 있는 학회, 대학, 정부, 비영리조직 등을 말하며 그 대다수는 학회이다. 투고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등재지가 투고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을 밝히고 있는 비율은 12.7%에서 12.4%로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분야별로는 그 증감률이 매우 다양하였다.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에서는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를 명시한 등재지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의학과 농수해양학, 복합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증가하였다. 의약학 분야는 11.3%에서 20.4%로 9% 증가하였고, 농수해양학 분야는 10.5%에서 17.0%로 7% 증가하였다. 사회과학분야는 2.8%에서 5.2%로 2% 증가하였다. 이들 분야와 달리 인



〈그림 10〉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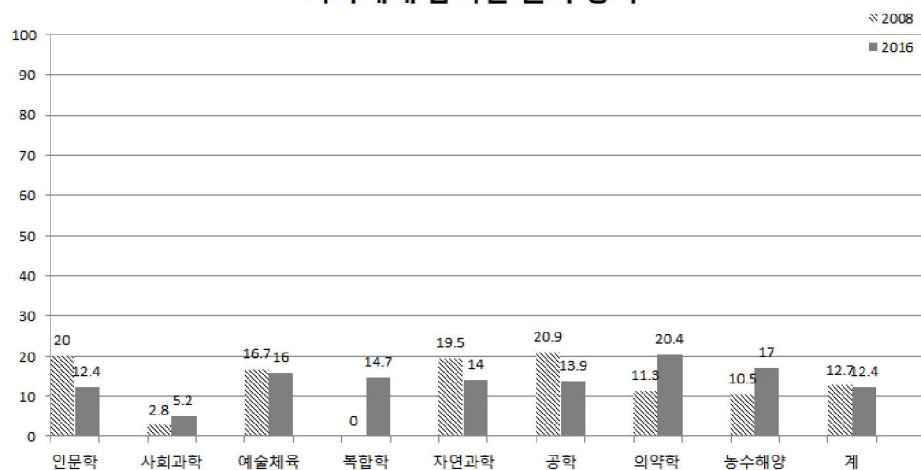
〈표 6〉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의 증감 현황

양도 동의서 구분		2008					2016						
		규정이 있는 경우				계 (%)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서'만 있음		계 (%)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	%	종	%		종	%	종	%	종	%	
인문학	0	0	40	100	40 (100)	37	15.3	191	78.9	14	5.8	242 (100)	
사회과학	7	8.9	72	91.1	79 (100)	98	24.1	253	62.4	55	13.5	406 (100)	
예술체육	2	22.2	7	77.8	9 (100)	19	30.6	39	62.9	4	6.5	62 (100)	
복합학	1	50	1	50	2 (100)	9	24.3	21	56.8	7	18.9	37 (100)	
자연과학	25	59.5	17	40.5	42 (100)	68	75.6	18	20	4	4.4	90 (100)	
공학	9	17.3	43	82.7	52 (100)	120	65.2	39	21.2	25	13.6	184 (100)	
의약학	32	51.6	30	48.4	62 (100)	151	76.6	33	16.8	13	6.6	197 (100)	
농수해양	2	10	18	90	20 (100)	31	56.4	14	25.4	10	18.2	55 (100)	
계	78	25.5	228	74.5	306 (100)	533	41.9	608	47.7	132	10.4	1,273 (100)	

문학 분야는 20%에서 12.4%로 8% 감소하였고,
공학 분야는 20.9%에서 13.9%로 7% 감소하였

으며, 자연과학 분야는 19.5%에서 14.0%로 6%
감소하였다(〈그림 11〉, 〈표 7〉 참조).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 명시



〈그림 11〉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를 명시한 등재지의 분야별 증감률

〈표 7〉 저자에게 남겨진 권리를 명시한 등재지의 증감 현황

저자권리 명시 분야	2008							2016									
	명시함					미명시 (%)	계 (%)	명시함								미명시 (%)	계 (%)
	규정		동의서		소계 (%)			규정+ 동의서		동의서		소계 (%)					
	종	%	종	%				종	%	종	%						
인문학	6	20	0	0	6 (20)	24 (80)	30 (100)	18	8.6	8	3.8	0	0	26 (12.4)	184 (187.6)	210 (100)	
사회과학	2	2.8	0	0	2 (2.8)	70 (97.2)	72 (100)	9	2.6	9	2.6	0	0	18 (5.2)	326 (94.8)	344 (100)	
예술체육	1	16.7	0	0	1 (16.7)	5 (83.3)	6 (100)	5	10	3	6	0	0	8 (16)	42 (84)	50 (100)	
복합학	0	0	0	0	0	2 (100)	2 (100)	3	8.8	2	5.9	0	0	5 (14.7)	29 (85.3)	34 (100)	
자연과학	0	0	8	19.5	8 (19.5)	33 (80.5)	41 (100)	0	0	12	14	0	0	12 (14)	74 (86)	86 (100)	
공학	5	11.6	4	9.3	9 (20.9)	34 (79.1)	43 (100)	9	5	11	6.1	5	2.8	25 (13.9)	155 (86.1)	180 (100)	
의약학	1	1.6	6	9.7	7 (11.3)	55 (88.7)	62 (100)	3	1.5	37	18.9	0	0	40 (20.4)	156 (79.6)	196 (100)	
농수해양	0	0	2	10.5	2 (10.5)	17 (89.5)	19 (100)	1	1.9	6	11.3	2	3.8	9 (17)	44 (83)	53 (100)	
계	15	5.4	20	7.3	35 (12.7)	240 (87.3)	275 (100)	48	4.2	88	7.6	7	0.6	143 (12.4)	1,010 (87.6)	1,153 (100)	

5. 논 의

5.1 저작권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 것의 의미

8년간 등재지 출판기관의 저작권 정책은 권리귀속의 명시, 용어사용, 권리양도 등 각 영역에서 조금 더 분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저작권 권리귀속을 밝히지 않았던 등재지가 더 많았던 것에서 이제는 이를 밝히는 등재지가 더 많아졌다. 2008년에 비하여 약 2배정도 증가한 67%의 등재지에서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 STM 분야에서 권리귀속을 명시하는 등재지 비율이 높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즉, 2008년도에도 STM 분야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 30%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2016년도에도 동일하였다.

권리소유주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발행자측이 권리를 소유한 비율이 1% 증가하여 91%에 이르고,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소유한 비율은 1% 줄어들면서 저자가 소유한 비율은 2% 증가하였다. 즉, 권리소유 관계가 모호할 수 있는 공동소유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권리소유를 밝히고 있는 학술지가 이전에 비하여 35%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소유주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학술지의 대다수가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사용에서도 모호함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판권이라는 용어사용이 사회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줄어들고 있었다. 지적소유권이나 저작권이라는 포괄적 용어대신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산권의 지분권을 명시하는 등재지가 증가하였다. 반면 편집저작권이나 출판권 등 출판과 관련된 용어와 논문사용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이는 논문저자의 권리보다 이를 출판하는 측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약 50%에 이르러 2008년에 비하여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STM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발행자측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받는 것은 학술지의 논문투고 규정 등에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문구만으로는 발행기관이 정확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국내의 학술지는 상업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동시에 정부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를 통하여 공개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정경희, 2011; 김규환, 정경희, 2017). 이 과정에서 상업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하

여 학술지 출판기관으로부터 명확히 권리양도를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가 학술지 출판기관이 저작권을 전보다 명확히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학술지 발행기관에 저작권 관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 또한 상업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운영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명확히 양도받지 않은 학술지 발행기관과의 협약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지난 10여년간 국내 학술지에서 저작권 관리가 보다 명확해진 것은 Ramello(2010)의 해석처럼 학술지 출판이 하나의 산업으로 편입되는 과정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5.2 강력한 권리주체로 등장한 학술지 출판기관

저작권 소유 주체에 대한 사항을 밝힌 등재지가 2008년 당시 약 34%였던 것에서 2016년에는 67%로 증가하였다. 반면 이들 중 저작권을 발행자측이 소유하는 등재지의 비율은 각각 90%와 9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저작권을 발행자측이 소유하고 있는 등재지에서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 등 자신의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의 비율도 각각 13%와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분야별로는 의약학 및 농수해양학 분야에서는 각각 11%에서 20%, 11%에서 17%로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자연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각각 20%에서 14%, 20%에서 12%로 감소하였다.

지난 십여년간 영미권에서 학술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그린오픈엑세스와 관련된다. 그린오픈엑세스란 구독기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경우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였더라도 저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혹은 자발적으로 해당 논문을 오픈엑세스가 가능한 리포지토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저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가 저자이므로 이를 저자에 의한 셀프아카이빙이라고도 한다. 이는 구독기반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오픈엑세스를 위하여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논문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가 다시 저자에게 자신의 논문에 대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해야한다.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을 등록해 놓은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4년에서 2015년간 출판사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Gadd & Troll Covey, 2017)에 따르면 2004년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는 약 73%였고 2015년에는 약 84%로 약 10년간 12% 증가하였다. Scopus의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출판한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조사한 연구(Laakso, 2014)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2010년 기준 Scopus 논문의 약 80%는 해당 논문의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셀프아카이빙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가 이와 같은 셀프아카이빙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거나(Visser, 2015) 저자의 개별적 요구 혹은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오픈엑세스 의무규정을 따르거나 소속기관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출판사에 이를 요구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이 약 10여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셀프아카이빙 방식의 그린오픈엑세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공개되는 학술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에서처럼 셀프아카이빙 정책이 학술지 출판기관의 저작권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내의 오픈엑세스가 영미권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보인다. 즉, 개별적인 저자나 연구비 지원기관 및 연구자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그린오픈엑세스가 아니라 학술지 출판기관과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학술지단위의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정경희, 김규환, 2016). 즉, 저자가 아닌 학술지 출판기관에 의한 셀프아카이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학술논문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자에 의한 셀프아카이빙이나 출판기관에 의한 아카이빙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학술논문의 재사용에 대한 권한이 최소한 저자에게도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가 언제든지 그들의 권한으로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와의 협약을 중단하여 아카이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 연구지원기관, 연구자 소속기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영역의 애그리게이터 등 학술지 산업의 이해당사자들 중에서 출판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권리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지 논문의 소유 주체 명시, 저작권 소유주체, 저작권법에 규정된 용어의 사용, 저자에 대한 허용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권리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 등 저작권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의 사용은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그 대신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재지가 증가하였다. 또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의 비율은 25%에서 50%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

다. 그러나 출판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고 있는 등재지에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등 논문의 저자에게 자신의 논문에 대한 재사용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13%에서 12%로 약간 감소하여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약 10여년에 걸쳐 학술지의 저작권 소유 주체가 점차 분명해지고, 학술지 출판기관이 저작권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 국내 학술지 출판이 영미권의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영미권의 오픈엑세스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출판사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이 부재한 국내의 현상이 결과적으로 학술지 출판기관이 학술지의 저작권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규환, 정경희 (2017).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 정책 현황 분석: 이용자 접근과 재사용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투고 준비 중 논문.
- 이재민 (2005). 오픈엑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경희. (2011).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73-391.
- 정경희, 김규환 (2016).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269-291.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69>
- 조경식 (2014).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저자와 저작권의 논쟁. 유럽사회문화, 13, 107-133.
- 최윤희 (2013).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
- Coleman, A. (2007). Self-archiving and th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s of ISI-Ranke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2), 286-296. <https://doi.org/10.1002/asi.20494>
- Dawson, P. H., & Yang, S. Q. (2016). Institutional repositories, open access and copyright: What are the practices and implications? *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35(4), 279-294. <https://doi.org/10.1080/0194262x.2016.1224994>
- Gadd, E. A., & Troll Covey, D. (2017). What does green open access mean? Tracking twelve years of changes to journal publisher self archiving polic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https://doi.org/10.1177/0961000616657406>
- Harper, G. (2009). OA and IP: Open access, digital copyright and marketplace competition. *Learned Publishing*, 22, 283-288. <https://doi.org/10.1087/20090404>
- Laakso, M. (2014). Green open access policies of scholarly journal publishers: A study of what, when, and where self-archiving is allowed. *Scientometrics*, 99(2), 475-494. <https://doi.org/10.1007/s11192-013-1205-3>
- Melero, R., Laakso, M., & Navas-Fernández, M. (2017). Openness of Spanish scholarly journals as measured by access and rights. *Learned Publishing*, 30(2), 143-155. <https://doi.org/10.1002/leap.1095>
- Melero, R., Rodríguez-Gairín, J. M., Abad-García, F., & Abadal, E. (2014). Journal author rights and self-archiving: The case of Spanish journals. *Learned Publishing*, 27(2), 107-120. <https://doi.org/10.1087/20140205>
- Page, G., Campbell, R., & Meadows, J. (1996). *Journal publishing: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Butterworths (Ramello, G. 2010. Copyright & endogenous market structure: A glimpse from the journal-publishing market.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7(1), 7-29. 에서 재인용).
- Ramello, G. (2010). Copyright & endogenous market structure: A glimpse from the journal-publishing market. *Review of Econo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7(1), 7-29.
- Visser, D. (2015). The open access provision in Dutch copyright contract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10(11), 872-878. <https://doi.org/10.1093/jiplp/jpv16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Kyoung Sik (2014). Debatte um autor und urheberrecht in der neuen medienumwelt.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13, 107-133.
- Choi, Yoonhyung (2013).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plan of journal articles in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Hong, Jae-Hyun (2008).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31-463. <https://doi.org/10.16981/kliss.39.1.200803.431>
- Joung, Kyoung Hee (2011). Characteristics of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Focused on KCI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373-391.
- Joung, Kyoung Hee & Kim, Gyuhwan (20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management for Korean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69-291.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69>
- Lee, Jae-Min (2005). Copyright possession and improving plan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For the open access strateg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